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것”

김승환 교육감, “잘하고 있는 특검 상대로 법적 대응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 비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박근혜 대통령 측이 특검을 상대로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데 대해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23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상 원칙은 누구든지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하고 또 대통령도 인간이기 때문

에 명예를 갖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일반 국민과 공직자 간에 형법상 보호를 받는 명예의 범위와 폭은 다르다”고 말했다. 박대통령 측이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통령의 연루 의혹을 보도한 언론과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 사실 공표죄’로 형사 고소 등의 법적대응을 선언한 것을 비판한 것.

김 교육감은 “공직자는 일반 국민보다

명예를 보호받는 폭이 더 적다. 또 지금이 올라갈수록, 법적·정치적 비중이 클수록 보호받는 명예는 더 축소된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 또는 수상의 지위에 들어가게 되면 명예를 보호받는 폭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신진국을 보면 국가 중대 사건이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 원수의 일상은 거의 분단위로 공개되는데 대통령의 삶은 개인의 삶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라는 것.

김 교육감은 “대통령이 자신의 명예권을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했다면 왜 그 수많은 사람들, 공직자들, 일반 국민들, 더구나 자라나는 학생들까지, 그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았나”라고 물은 뒤 “특별검사,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냉정하게 법적 위상에 따라 판단할 것인 만큼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특검 “최순실, 학사비리 먼저 조사”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상대로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우선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학사비리 당사자인 정씨의 경우 덴마크 법무부가 구금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소환여부를 결정해 한국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에 관한 수사 진행상황이 빠르고, 수사를 빨리 종결할 가능성이 있어 우선 업무방해 혐의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이후에 추후에 다시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추가로 적용할 혐의로 뇌물수수 외에도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체포영장은 혐의별로 발부할 때 때문에, 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에 대해서만 조사가 가능하다”며 “이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구인으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덴마크에서 구금중인 정씨에 대해 특검팀은 “덴마크 법무부 장관이 이달 30일 이전에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덴마크 경찰이 검찰로 정씨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덴마크 법무부 장관이 30일 전에는 소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달 30일은 정씨에 대한 덴마크 사법당국의 구금이 만료되는 날이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별도의 추가적인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한 뒤 “외교부를 통해 정씨의 독일비자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뉴스1

“하야 이유 차고 넘친다”... 시민 4321명 ‘차탈핵 의견’ 현재 제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직 파면 사유 시민 의견서’ 4000여 통을 헌법재판소(헌재)에 전달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기한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지난해 12월부터 박근혜 대통령직 파면 사유 한 줄 쓰기 운동·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 결과 4321명의 시민들로부터 헌재에 전달할 의견을 접수했다.

시민들은 “박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거짓말로 자신의 과오를 감추려는 비겁함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이 시대 우리가 역사에 내는 수 업료가 헛되지 않도록,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는데 앞장섰다” 등의 의견을 냈다.

또 “2014년 4월16일에 이미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나라의 콘트러타워 역할을 못하고 세월호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통령”, “지킬 수 있는데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단 1%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내려야 한다”, “허수아비 대통령은 필요 없다” 등의 의견으로 울분을 토했다.

시민들은 “나는 정의로운 나라에 살고 싶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바란다”, “하루빨리 일상에 집중하고 싶다” 등의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 /뉴스1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교안, ‘박근혜표 정책’ 밀고 간다... 대권도전 여지도 남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23일 신년 기자회견은 경제 정책에서부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위안부 소녀상 등 주요 외교 현안까지 ‘박근혜 표 국정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황 대행은 대권 도전의 여지도 완전히 닫아 놓지 않아 친박계와 보수층의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 분석이 나온다.

황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1시간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그 내용을 밝혔다. 직무정지 중인 박 대통령을 대신해 권한대행 자격으로 새해 국정과 관련한 대(對)국민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황 대행은 약 20분간 읽어내려간 모두발언에서 ▲확고한 안보 ▲경제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보 ▲민생안정 ▲국민안전을 새해 주요 국정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는 탄핵소추 전 박 대통령이 추진해 온 국정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들이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전방위 대북제재를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 창업 촉진, 규제개혁, 과학기술과 ICT 육성(창조경제) 등 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답습해 제시했다. 민생안정과 국민안전 분야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 4대 사회

약 적절 등 기존 기조를 유지했다. 황 대행은 또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민분열과 사회갈등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면서도 박 대통령의 국정비전이었던 국민대통합의 가치를 내세웠다.

그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대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장차에 따른 극단적 대립이나 이분법적 사고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황 대행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팔뚝비틀기’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도 여러분께 부담 드린 일도 있고 더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드리지 못한 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업인들에게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사드와 위안부 소녀상 갈등 같은 민감한 외교 현안 역시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았다. 황 대행은 “사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 방어수단”이라며 “물론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급적 할 수 있는대로 조속히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못박았다.

일본 정부가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위안부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본 틀은

민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녀상은 민간 차원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일 관계와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정부 차원에서 같이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루트와 채널로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황 대행은 대선 출마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그런 여러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어려운 국정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전력을 쏟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스1

인명진 “2차 탈당? 걱정 없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23일 박순자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는 등 설 연휴 전 2차 탈당 움직임이 본격화 되자 “걱정 없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인 위원장은 또 “10여명 정도가 탈당을 고민하고 있다”고 묻자 “12명만 가지면 된다.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을 갖고 했다. 사람이 뭐 문제냐”고 답했다. /뉴스1

“정부 발주 물량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해야”

최인정·양용호 의원, 산자부 앞 1인 시위...울산현대중공업·정몽준씨 자택 앞도 예정

전북도의회 국민의당 최인정 의원과 양용호 의원은 23일 오전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정부는 군산조선소 경제파급 효과를 고려하고 도크를 존치시키기 위해 정부 발주 물량을 우선 배정해달라”며 1인 시위를 펼쳤다.

특히, 최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동종산업으로 이미 1,351명이 실직했으며 총 5,250명과 함께 80여 협력업체가 대량 실직과 줄도산해 지역경제가 초토화 된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또, 그는 정부의 원칙 없는 조선해운업계 지원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STX조선과 대우조선해양은 자금 등을 지원한 반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도크 가동 중

단이라는 강경책으로 전북경제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제외돼 있는 군산조선소 정상화 계획을 추가로 포함시켜 상생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정부의 강경책에 현대중공업은 ‘경영상 합리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이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동안 도는 현대중공업에 현금 200억원 지원과 그 외 조선산업 클러스터, 인근대학의 조선학과 신설과 산학협력단 구성 등 조선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백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현대중공업은 단순히 기업이 투자한 비용에 폐쇄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도가 투자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해 심사숙고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인정 의원은 “정부가 탄소산업과 농기계산업 지원방안으로 군산 조선산업을 제외했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 발주 계획이 있는 조선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용호 의원은 “군산지역 근로자도 국민이며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일방적인 회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고등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과 양 의원은 23일부터 3일간 산자부를 비롯해 국회, 울산현대중공업, 정몽준씨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이재명 “노동자 출신 대통령 되겠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세월에 돌입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공단 내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북 안동 화점민 가정 출신인 이 시장은 국민학교(초등학교) 졸업 즈음인 1976년 경기도 성남으로 이주해 영세공장을 옮겨다니며 소년공 생활을 한 바 있다. 소년공 시절 팔에 장애를 얻었고,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경쟁아동’으로 통과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특히 해당 시계공장은 이 시장이 1979년부터 2년간 소년공으로 일했던 곳이다. 이같은 장소를 택한 배경에는 적폐청산과 국가 대개혁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 시장은 이날 적폐청산을 통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경제’와 불공정과 불평등없는 ‘공정국가’를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인 플랜으로는 ‘이재명식 뉴딜성장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역사상 가장 청렴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가족을 비롯해 1,000명 남짓한 이 시장 지지자들이 공장 앞마당을 가득 메웠다. 지지자들 손에는 이 시장이 자주 강조해 온 ‘국민머슴’, ‘억강부약’부터 ‘갓(God)재명’ 등 별명 이 적힌 현수막이 들려 있었다. 이 시장의 온라인 지지자들은 ‘손가락 혁명군’도 대거 자리를 채웠다. 이 시장을 돕고 있는 채운경, 김영진,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김기춘 전 의원이 이곳을 찾았다. /뉴스1

유진룡 “블랙리스트 김기춘이 주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존재 등을 폭로한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17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한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 유일하게 김 전 실장 혼자 아직 없다고 하는 것 같다”며 “조운선 전 장관도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는 분명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저와 동료, 후배들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모든 정보를 취합해 볼 때 그건(블랙리스트) 분명 김 전 실장이 주도한 것”이라며 “김 전 실장이 취임한 이후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파문에 대해 “자기네 정권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하기 위해 좌익이란 누명을 씌운 것이기 때문에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유신시대부터 전두환 정권 때까지 이러한 리스트가 존재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민주주의 역사가 3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장관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다.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가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유 전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 6월 블랙리스트가 문건 또는 서류 형태로 청와대에서 문체부로 내려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정무수석은 최근 구속된 뒤 사직한 조운선(51·구속) 전 문체부 장관이다.

또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블랙리스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던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이 숙청 ‘축내기’를 당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유 전 장관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 과정, 문체부 부당 인사 조치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관주(53·구속) 전 문체부 1차관 등도 불러 조사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 되면 호남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이들께 호남을 방문 중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대통령 되면 당연히 호남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손을 잡고 함께 할 것”이라고 재차 호남 민심에 구애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영주체육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언론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에 호남이 다시 한번 제 손을 잡아주신다면 저는 절대로 호남의 손을 놓지 않겠다”며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어느 지역도 소외받지 않는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호남소외론에 대해서 “호남의 소외는 사실 박정희 체제가 남긴 적폐”라며 “박정희 정권은 경부축을 중심으로 불균형 성장을 취했다. 그 바람에 호남은 늘 소외되고 홀대됐다. 참여정부가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가적 목표로 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나 5년, 10년으로 하루아침에 적폐가 해결되지 않는다. 20~30년은 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제가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새시대의 첫차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첫차를 강조한 이유는 앞으로 2호차, 3호차가 계속해서 민주정부가 이어져야 호남의 삶, 소외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뉴스1